

집권당 vs 현역 경쟁력... ‘행정통합’ 속 충청 민심 어디로

☞ 지방선거 돋보기

충청은 우리나라 정치의 ‘가늠자’ 역할을 한다고 평가되는 지역이다. 윤석열 정부 초반 치러진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충북도지사(김영환), 충남도지사(김태흠), 대전시장(이장우), 세종시장(최민호)을 석권하며 압승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중반에 치러진 22대 총선에선 충북·충남·대전·세종 28개 지역구 중 6곳만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며 참패를 겪었다.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도 이런 흐름은 이어졌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현직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대거 재선을 노리는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전직 단체장 등 더불어민주당 지역 정치인들의 도전도 거센 상황이라서 다시 한번 충청의 민심이 주목 받고 있다.

◆충청 최대 현안 ‘대전·충남 행정통합’

6·3 지방선거를 4개월 남짓 앞둔 가운데, 대전·충남 행정 통합이 지역 정가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대전·충남 행정 통합이 국회에서 조속히 마무리되면, 지방선거에서 초대 대전·충남통합 특별시 초대 시장을 선출할 수도 있어 정치권의 쟁점도 복잡해지고 있다.

행정통합으로 대전과 충남이 하나가

④ 韓정치 가능자 ‘충청도’

통합 초대시장 가능성에 쟁점 복잡 강훈식 비서실장 출마 여부 관심 野, 현직 프리미엄 업고 연임 도전

되면 인구 357만, 지역내총생산 197조 원 등 국내 3위 규모 메가시티가 탄생하게 돼 정부 지원 등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할 수 있다.

담당 상임위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9일 입법공청회, 10~11일 축조심사, 12일 전체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제로 민주당에서 발의된 안이 재정과 권한 이양이 축소되고 의무 규정이 많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안과 달리 임의 규정이 많으며 현직 단체장과 야당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어 실제로 매끄럽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여당에선 강훈식 비서실장 등판론 ‘솔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떠나 지역 정가의 또다른 관심사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6·3 지방선거 도전 여부다. 충남 아산읍에서 내리 국회의원 3선을 한 강 실장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전·충남통합특별시 초대 후보군으로



전용기(왼쪽부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백송아 원내대변인이 지난 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거론되고 있다.

강 실장 외에도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은 일찍이 대전·충남통합특별시 선거 출마 선언을 한 바 있으며, 장종태(대전 서구갑) 의원 역시 지역 관료 출신 경험을 살려 행정통합을 완성시키겠다며 출마 선언을 했다. 4선의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도 고심 끝에 단체장 도전 결심을 밝히며 지역위원장을 사퇴했다. 전직 단체장인 양승조 전 충남지사, 허대경 전 대전시장은 각각 충남도지사와

대전시장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외에도 문진석(충남 천안시갑)과 박정현 부여군수 등도 대전·충남통합특별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충북지사 선거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민주당 의원이 당원 명부 유출 사건으로 사고도 당으로 지정된 충북도당을 수습하기 위한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지명되면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한 노영민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한범덕 전 청주시장, 송

기섭 진천군수와 예비후보로 등록한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자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장 선거는 국회 출신인 홍순식 전 보좌관, 고(故) 이해찬 전 총리 보좌관을 지낸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등이 출마 선언을 했다.

◆야당은 현직 단체장 연임 도전 유력

국민의힘에선 현직 단체장들이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졸지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략한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쉽사리 선거에 도전하려는 인사가 나오지 않는 편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연임 도전이 유력하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의제에서 행동을 함께하며 지역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이 발의한 행정통합안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성립종 의원이 발의한 원안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충북지사 선거도 현직인 김영환 지사가 재선 도전을 시사한 바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청장이었던 윤희근 예비후보도 충북지사 선거에 도전한다. 세종시장 선거도 현직인 최민호 시장이 연임 도전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민주당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오늘 발의” 정청래 “2차특검 추천, 대통령께 사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위한 결단 “35개 법률 위반 행위 직접 수사”

더불어민주당은 9일 당과 정부가 전날(8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결정한 데 대해 “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는 2025년 10월 ‘부동산 투기를 통한 자산 증식은 과거의 생각’이라고 천명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실현하고, 국정과제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완수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될 부동산감독원은 단순한 자문 기구가 아닌 국토부, 국세청, 경찰, 금감원 등으로 분산돼 있던 부동산 감시 기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수사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어 “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신분을 부여할 예정”이라며 “불법 증여와 시세 조작, 기획부동산 등 지능화된 부동산 범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며 부동산 관련 35개 법률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감독원을 통해 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조사 결

과에 따른 즉각적인 고발과 단속을 시행해 ‘부동산 불법으로는 단 1원의 이익도 얻을 수 없다’는 무관용의 원칙을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킬 것”이라며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시장 경제를 교란하는 투기 세력을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친한계 김종혁 제명 확정

김종혁 “법적 책임 물을 것”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탈당 권유’ 중징계를 받은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현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사진)에 대한 제명을 확정했

다. ‘탈당 권유’는 일정 기간 내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하는 징계 조치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포함한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인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



의 당원 징계안이 보고돼 최종 제명 처리됐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달 26일 ‘당론에 어긋나는 언행’ 등으로 회부된 김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서예진 기자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 이력 논란 이언주 “제2체포동의안 가결” 비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전준철 변호사 2차 종합특검 추천과 관련해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공은 당원들에게 돌리고 과는 제가 안고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종합특검 후보로 검찰 ‘특수통’ 출신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했는데, 전 변호사는 2023년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을 회장의 변호를 맡은 이력이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한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당에서도 정청래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정 대표는 특검 후보 검증은 담당한 원내지도부를 향해 “특검 추천 ‘사고’를 보면서 그동안의 관례와 관행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당에 설치된 인사추천위가 있다. 예를 들면 방미동위 상임·비상임위원 추천에 있어 (추천위가) 인사검증을 철저히 한다”며 “특검은 이상하게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이뤄지던 관행이 있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어 “앞으로는 특검 또한 철저하게 인사추천위에서 검증하고, 올바른 사람인지 토론하고, 최고위에 올려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번과 같은 인

사 사고를 막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의 사과에도 당내 반발은 여전했다. 비당권과 최고위원인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는 것은 단순 실수로만 치부할 수 없는 뼈아픈 실책”이라며 “우리 당과 대통령께 심각한 정치적 부담을 주는 행위였으며,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도’와 다름없다는 게 당원과 지지자들의 시각”이라고 비난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김성태 전 쌍방을 회장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변호사가 우리당이 추천한 후보였다는 사실이 제 상식과 원칙, 당원으로서의 제 신념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최소한의 상황 인식을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2차종합 특검 후보로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선 김성태 변호인을 추천한 것은 분명한 사고”라며 “정중하고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변호사를 추천했던 검찰 출신 이성윤 최고위원은 “(특검 추천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음을 느낀다”며 “이번 2차 종합특검 추천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다만 이 최고위원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전준철 변호사가 대북송금 조작 의혹 사건의 변호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다”며 “제 삶의 궤적에서 보면 제게 특검을 천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해석과 음모론적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서예진 기자 syj@